

第13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行政首都 移轉反對 決議文(南哉慶議員 外 14人 發議) 1面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안)

의안
번호

981

제출일자 : 2003. 12. 2

제 출 자 : 남재경 의원 외 14인

1. 주문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까지 포함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행정 수도 이전은 경제·사회·정치·문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민족과 범국가적이며 역사적인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도 수도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안정된 생활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종로구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수도 이전을 강력히 저지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우리 종로구 의회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선 국민합의, 후 수도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함.

-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 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5) 「신 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 6)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며 종로구 의회 의원일동 이름으로 이를 대외에 천명함.

3. 결의문

수도 서울의 600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 의회는 수도권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신 행정 수도 건설기획단」과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신 행정 수도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금의 서울은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며, 88올림픽, 월드컵 경기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므로 이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적·국제적 손실이며
 -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충청도로 이전한다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 충청권으로의 이전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 정부마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면 수도서울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 특히 외국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도 철수할 우려가 있다.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상권의 침체, 주택·교육문제와 충청권까지의 출·퇴근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 외교·관광·통상 면에서 국제적인 혼선과 수도권 지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정부의 직접 지출과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거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최소한 50만 명이 이전하려고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의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러한 엄청난 이전비용에 비해 행정수도 자체의 성장 잠재력이나 분산의 파급 효과 등은 극히 미미하여 향후 대표적인 국력낭비 사업으로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5. 「신 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 행정수도 건설기획단」 및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신 행정 수도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행정 수도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6.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북진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거꾸로 남하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취적인 기상을 포기한 것이며
- 통일 후 수도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성을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대도시를 특성화 및 집중 육성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며

-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며
종로구 의회 의원일동 이름으로 이를 대외에 천명한다.

2003. 12.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의원 일동